

# “우리 조합원 채용시켜줘”... 갑질 노조원 103명 검찰 송치

관계부처, 100일간 집중 점검  
공정거래법위반 20여건 조사  
불법행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아파트 건설현장.

/유투이미지

타 노조원 채용을 막기 위해 업무를 거부하거나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는 등 건설현장 일부 노조의 채용강요 같은 불법행위 근절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러 부처 소관 업무 특성상 관계부처 협업으로 100일 만에 불법 관련자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20여건에 대한 조사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9일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해 그간의 점검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제1차장, 사회조정시장,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일부 건설현장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불법 점거하는 등 등의 행위가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작년 10~12월까지 약 100일간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 현장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 파악과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부처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그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 12월6일 마련해 시행,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의 과태료 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6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 건설현장의 경우 새로운 타워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자 기존 타워를 운행하던 타 노조 기사들이 작업거부와 집회를 하며 B노조 기사 채용을 무산시켰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으며, 불법행위는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B 건설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이 무리지어 횡단하고, 동전을 바다에 뿌린 후 쥘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벌여, 관련 피의자 24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신속 처리 완료할 계획이다.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국토부가 직접 운영하는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

정부는 지난 100일 간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그간 TF 점검 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 미비점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올 전기차 지원금, 최대 700만원으로 인하

산업부,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



전기차 충전소에 삼성전자 사이니지를 도입한 상상도.

/삼성전자 뉴스룸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전년보다 2배 넘게 확대하는 대신 대당 지원금액을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관계부처와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우선 전기차 보급물량을 총 20만 7500대로 전년 10만1000대 대비 2배 이상 키운다. 차종별로 승용전기차는 16만4500대, 화물 전기차는 4만1000대, 승합 전기차는 2000대다. 대신, 최대보조금액은 승용 전기차는 전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 전기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승합 전기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감액된다.

전기차 대중화 가속화를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무공해차 전환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100% 지원 구간 차량 가격(기본가격 기준)은 전년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지원,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으로 분류했다.

특히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 대비 가격을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를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

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해 최대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상용차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는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또,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하면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로 주고,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도 추가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업부, 국제유가 오름세에 석유시장 점검

유가 상승 영향 최소화 방안 논의

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내 석유업계는 카자흐스탄의 원유생산차지, 예멘 반군의 UAE 석유시설 공격 등에도 국내로의 원유 도입은 차지없이 이뤄지고 있고, 석유 제품 공급에도 영향이 없도록 필요시 대체 원유 확보 등 수급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석유공사는 오미크론 확산에도 석유수요가 견조한반

면, OPEC+의 증산속도 조절, 감산기조 유지, 일부 석유생산국 생산차질 발생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고, 남은 동절기 기간 중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점인 작년 11월 둘째주부터 9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유가 상승세를 감안할 경우 오름세 전환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2021년 11월 1주 리터당 1788.0원에서 2022년 1월 2주 1621.9원으로 하락했다. 두바이유는 같은 기간 배럴당 81.67달러에서 71.67달러까지 하락했다가, 81.85달러까지 상승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단위:건,%) /한국소비자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택배	223	57 (25.6)	201	39 (19.4)	277	49 (17.7)	701	145 (20.7)
상품권	228	35 (15.4)	298	48 (16.1)	495	103 (20.8)	1021	186 (18.2)

## 설 명절,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위·한국소비자원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소비트렌드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 등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에 따라 택배 이용과 온라인 상품권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20년 33억7000만 박스였던 택배 물량은 2021년 11월 65억9000만 박스로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설 연휴가 긴 1~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된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45건, 186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20.7%, 18.2%에 해당한다.

올해 설에는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격 상승도가 2배 늘어나면서 신선·냉동식품 관련 배송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상품 부패·변질 등 피해가 예상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코로나로 상품대금 지연 대리점 이자 감액

공정위,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 제정

코로나19 영향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경우 대리점이 상품대금을 지연지급해도 지연이자를 감액·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거래계약서를 제정해 발표했다.

6개 업종 공통으로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 시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경감·면제 ▲대리점에 공급업자의 온라인판매 관련 정보제공 요청권 부여 ▲대리점에 계약갱신(4년 범위 내) 요청권 부여 등을 규정했다.

우선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

대금을 지연 지급해 발생하는 이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6%)로 한정했고,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대리점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공급업자에 대한 상품대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를 경감·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해 그 종류, 수량, 가격, 납품 기일을 사전에 발주의뢰서, 매출전표 등의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정한 내용대로 납품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